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 건설부문 이슈는 무엇인가

조 철 현 | 아주경제 건설부동산부장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여야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현재 국감의 쟁점과 증인 선정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가 강하게 격돌할 건설 쟁점 및 현안 사안이 적지 않다.

올해 국감 핵심은 4대강 사업 문제, KTX 민간 사업자 선정 논란 등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강하게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요 쟁점 사안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실효성 및 향후 관리 비용 처리 문제 등이다.

4대강 사업, 국감 핵심 쟁점

4대강 사업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4대강과 지류·지천 사업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올 들어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국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감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며 버르고 있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방어 모드만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공격을 방어하기만 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여야 모두 집중적으로 추궁

할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1월 당사에서 4대강 홍보 간판을 떼어내면서 현 정부와 박근혜 당 대선 후보와의 차별화를 고려한 현안 점검을 예고한 상태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친수구역 개발 등 후속 사업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가뭄과 홍수 피해 등에 따른 4대강 사업 효과를 따져 물을 방침이다. 19대 국회 전반기 국토해양위원회를 이끌어갈 민주통합당 소속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은 올 정기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검증’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



제19대 첫 국정감사가 이달 초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국토해양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터뷰에서 “4대강 사업이 이번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가 돼야 된다”며, “이명박 정부의 제일 큰 프로젝트였던 4대강 사업이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 의혹 공방 가열 예상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 비리를 무더기로 적발하고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처리 시점을 청와대와 협의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통합당 4대강 사업 비리담합조사소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지난 9월 초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2월 작성한 공정위의 ‘4대강 입찰 담합 조사 진행 상황’ 문건을 공

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4대강 입찰 담합 향후 처리 계획과 관련, “사건 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필요”라고 적혀 있다. 또한,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조사 중이라는 논리만 2년 간 계속 내세우기 어렵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쳐 4대강 담합 사건 처리 시점을 대선 이후로 지연시키려 했다”며,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예상 밖으로 승리하자 공정위가 ‘털어내기’ 식으로 올해 6월 담합 사건을 심의·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합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4대강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 담당 국장 및 실무자 등의 잦은 이동 등으로 다소 지연된 부분도 있지만 청와대 등 어떤 외부의 압력은 물론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공정위가 4대강 입찰 담합에 대한 법 적용을 변경해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도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공정위가 2009년 12월 4대강 영주댐 입찰 담합 조사에 착수했으나 32개월째 조사 결과를 숨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액수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야당 측 설명이다. 8개 대형 건설사가 부과 받은 과징금은 1,115억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원칙대로 적용했을 경우 최소 5,530억원에서 최대 7,335억원의 과

■ 이 슈 진 단

징금을 부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대 6,000여 억원을 깎아줬다는 것이다.

현재 여야는 4대강 사업 건설사 담합 처벌 축소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공정위 외부위원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놓은 상태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통합당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단순히 답합뿐만 아니라 비자금 조성 및 민간인 사찰 문제 등과도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가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백 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4대강 비자금’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통합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4대강 사업 전체 구간에서 건설사들의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해양위에서는 공정위와 4대강 담합 업체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사건 처리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정무위는 공정위가 담합 건설사의 과징금을 깎아준 것과 누장 처리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KTX,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도 이슈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문제도 핫 이슈다. 또 KTX 민간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현안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주승용 위원장은 최근 “인천공항이나 KTX는 둘 다 흑자가 나는 사업”이라며, “왜 흑자가 나는 사업을 그것도 임기 말에 특혜 의혹 시비가 붙음에도 불구하고 팔려고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KTX를 민간 기업화하면 경쟁 체계가 도입되고, 그렇게 철도공사와 경쟁했을 때 서비스도 더 좋아질 것이고 운임도 인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 추진한 주요 민자사업에서 맥쿼리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맥쿼리 인프라’ 특혜 의혹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맥쿼리가 2대 주주인 서울시 메트로 9호선과 부당한 계약을 맺어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서울시 협상 담당자들이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

회사와 실시협약을 맺으며 현대로템 컨소시엄이 제안한 기본 요금 700원(2003년 1월2일 기준 불변가격)보다 43%나 비싼 1,000원을 기본 요금으로 책정하도록 해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규정(MRG)에 의해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에 운영 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 예상 운임 수입의 90%, 다음 5년 간은 운영 수입의 80%, 다음 5년 간은 70%를 보장하기로 해 15년 간 최대 1조 4,191억원에 이르는 운영 수입을 보장해주는 비상식적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도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발생한 서울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 불감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 밖에 국토해양위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높은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부실 경영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들 기관의 상당수가 매년 반복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서다. CERIK